

◆ 政府 施策 ◆

## 調整 · 割當關稅 대상품목 확정

### - 규소강판 4% 적용, 하반기 시행 -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하반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품목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차전지를 비롯한 34개 품목의 조정관세 적용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5년 하반기 조정관세 적용대상품목 및 세율은 경제차관·장관회의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내용이 조정됐는데 △영지버섯·국수가 조정관세 대상품목에서 아예 제외됐고 △나무젓가락은 조정관세율이 4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고사리는 현재 65% 또는 Kg당 1781원중에서 고을(액)에서 50% 또는 Kg당 1370원중에서 고을(액)으로 인하됐다.

한편 할당관세는 당초 재경원이 마련한 안을 수정없이 적용하게 됐다.

■ 調整關稅 대상품목(관련품목)

(’95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8506	일차전지	외용적 300세제곱 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망간 건전지 2. 알칼리 망간건전지	20
8533	전기저항기	바리스터로서 최대사용 전압이 2,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35

■ 割當關稅 대상품목

(’95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7225	기타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규소전기강의것에 한한다	4	수입전량

# 공업기반기술개발 課題 확정

## — 通産部, 10월부터 총 1637억원 지원 —

통상산업부는 95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할 109개의 기술분야를 확정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79호, '95. 6. 16) 했다.

통산부는 이들 분야의 개발을 위해 금년중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530억원, 中期거점기술개발 사업 460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27억원 등 1017억원의 공업기반기술개발 출연자금과 산업은행의 생산기술개발 융자자금 620억원 등 총 16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기술개발 수요 도출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공작기계·전자부품 등 43개의 기술교류회를 구성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전문가 530여명이 참여하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109개 기술분야를 올해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생산기술연구원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신청된 접수과제는 분야별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해 10월부터는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통산부는 올해 지원분야로 공고되지 않은 기술분야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96~2000년)에 반영해 내년부터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교류회의 수요도출과제 이외에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따른 전략핵심부품개발 등 신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조사 보완작업을 추진해 기술개발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 '95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 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가. 지원분야

사업구분	지원분야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 105개 기술분야 ○ 공고분야 이외의 분야는 자유과제로 선정 지원 - 수도권 이외의 지방중소기업에 우선지원 - 지역특화 기술, 대일역조개선관련기술 가스안전관련 기술분야에 우선 지원(자유과제 예산: 총 10억원 이내)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 4개 사업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써 자유로이 응모 할 수 있음

나. 신청요령

1) 신청 자격

- ① 민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 ②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단체
- ③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 ④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의 자유과제는 참여기업 전체가 서울 및 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함.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4개사업은 세부기술개발 과제의 일괄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괄주관기관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세부 기술개발과제별로 개별신청도 가능함

2)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으로 추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센터 (02-860-1647/9)
- 접수기간 : '95. 8. 7~'95. 8. 14(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4) 기타 참고사항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은 1개 과제당 총개발기간을 3년이내로 하며, 정부출연금 신청규모는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기개발,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는 심의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50%를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 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술료 미징수 과제로 공고되어 기술료 미징수로 평가를 받은 경우는 개발 결과의 공동 활용계획을 작성 시행하여야 함.

## 다. 기타

○문의처 :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 센터

-기계, 자동화, 광학 분야 : 02-860-1653 / 9

-재료, 기반기술, 화공, 섬유분야 : 02-860-1763 / 9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S/W 분야 : 02-860-1663 / 9

○공고과제 목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센터에 문의바람.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과제는 공업발전기금등 정책금융자금으로 신청가능함.

## 2.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가. 지원 분야 : 공고된 분야에 응모하여 미선정된 과제 또는 공고되지 않은 분야로서 금융지원이 필

요한 기술개발분야중 통상산업부의 추천을 거쳐 지원

나. 신청자격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다. 지원조건

○융자금리 : 연리 8%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비율 : 총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지원한도 : 없음

##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산업은행 본점 및 전국 각 지점(기술개발지원팀 및 여신담당 부서)

마. 문의처 : 산업은행 본점 기술개발지원팀(398-6418-30)

## ■ 공통애로기술 개발사업 분야

구 분	기 술 분 야	세 부 기 술 내 용
용접분야	○ 고속 FILLET 자동 용접용 용접 재료 개발	-Primer 강제용 1.2m/min, 이상과 고속 Fillet 용 접재(Metal Cored Wire등) 개발
	○ 저항용접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	-저항용접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능형 제어기(Timer) 개발
	○용접 ARC 현상해석 및 응용기술 ※기술료 미징수과제	-전류·전압 파형 분석 제어기술 -금속이행 현상 분석 및 제어기술 -Arc현상의 정량화 평가기술

구 분	기 술 분 야	세 부 기 술 내 용
전기제품	○신제어 기술을 적용한 가전 제품 개발	-한국형 밥맛을 내는 차세대 전기보온밥솥 개발 -Neuro Fuzzy, Chaos 및 GA(Genetic Algorithm) 등의 가전제품 개발
	○안정기 기술	-원격조정가능, 조도의 자동제어, 조명범위의 자동설정 및 다른 설비와의 연도가능한 조명제어 시스템 개발 -방전등 자동 출력전압 조절 인버터 개발 -수 MHz 이상의 무전극 램프용 고주파 전원장치 개발
중전기기	○고성능 교류서보전동기	-80%이상 향상된 고점적용 권선기술 -고정밀, 센서리스 제어기술 -고에너지적(450MGOe)을 갖는 희토류 영구자석
	○고신뢰성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고정주파수 13.56MHz의 RF Generator 시스템

■ '95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분야

구 분	사 업 명	세 부 기 술 분 야
기계	수치제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운용체제 관련기술</li> <li>· CNC Architecture 설계기술</li> <li>· CNC 제어 및 서보/스핀들 드라이브 제어 Algorithm 설계</li> <li>· 가공 Programming 환경 및 Monitoring 기술</li> <li>· 서보/스핀들 모터 설계기술</li> <li>· 서보/스핀들 드라이브 설계기술</li> <li>· Sensor등 약세사리 기술</li> <li>· 수치제어장치 시험·평가 기술</li> </ul>
전자	전자재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D type 수동부품의 후막전극 Paste</li> <li>· 1005 Size MLCC</li> <li>· 초고주파 SMPS 용 Ferrite 및 Core</li> <li>· Pc Drive 구동모터용 고품성 Sr-Ferrite</li> <li>· 고강도/고전도형 컨넥터용 동합금</li> </ul>

## 小企業 ISO 인증 본격 支援 - 통산부, 2천년 2천개社 목표 -

소기업을 위한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이 본격화 된다.

통상산업부는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ISO 9000인증제도가 소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50인이하의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 전담 ISO 9000 인증 센터를 설치, 오는 2천년까지 2천개의 소기업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심사비용을 50%까지 대폭 감면해 주는 한편 中振公 기술지도 기금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약 217억원의 비용을 정부출연으로 일부 보조받고 나머지는 기존의 진단지도사업 구조개선을 통해 자체 조달키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소기업 ISO 900 인증획득 지원방침은 현재 국내 ISO9000 인증신청 수요에 비해 인증기관의 심사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인증심사비용이 1천~5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6개월에서 1년의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전문인력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우선 7월초부터 소기업에 대한 ISO 9000 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9월 'ISO 인증센터'를 정식 설립한 후 매년 400~500개 기업을 인증해 줄 계획이다.

이같은 소기업 ISO 9000 인증 확대추진으로 2천년까지 수출기여효과는 28억달러, 중소기업 수익증대효과는 1684억원에 이를 것으로 통산부는 전망하고 있다.

## 兵役指定業體 신청 접수 - 通産部, 7월 1일부터 8월 10일 까지 -

통상산업부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95년도 병역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올해 병역지정업체 해당 제조업분야는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시멘트 및 요업·생활용품 등 전제조업으로 지정업체 신청자격 및 추천 기본원칙은 공장등록증(정보처리관련업은 제외)을 필한 법인으로 추천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추천기준이 작년의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났는데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영위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2개 기준은 관련법 개정 및 판단기준 모호로 삭제됐으며 △100PPM 품질혁신 추진기업 △창업투자 회사가 투자한 기업 △신기술 인증업체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 입주기업 등 4개 기준이 추가 됐다.

기술 및 능자자격증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일정기간(3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해당기업의 인력난을 덜 수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올해 수준인 3만5천명 이상 배정하는 한편 지정업체수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10일까지 상공회의소와 기협 중앙회에 접수된 신청서류는 통산부의 취합·추천심사와 병무청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선정된다.

■ 제조업 분야 지정업체 선정 대상업종(전기분야)

제조업분야	코드번호	신청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분류 및 세세분류)
전기	3	29142(전기식에 한함), 29225(자장모터식에 한함), 29226(전기식에 한함), 3110, 3120, 3130, 3140, 3150, 3190, 33201(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제조업에 한함)

## 包括輸出승인제 폐지

### - 10만弗 이하 輸出 무역업 등록 不必要 -

7월 1일부터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소액물품은 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종상품을 일정기간 반복 수출할 경우에 적용되던 포괄수출승인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갑류무역대리업(오피상) 및 을류무역대리업(바잉오피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특히 산업설비(플랜트)수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가 첫 도입된다.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무역업 등록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5만달러 이하 물품의 수출로서 통산부 장관이 정한 것'에서 '10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통산부는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송금방식수출은 5만달러, 신용장방식은 2만달러까지 등록을 면제(대외무역관리규정)하고 있으나 7월부터 송금방식은 10만달러, 신용장방식은 5만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을 무역대리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무역대리업등록증'은 '무역대리업신고필증'으로 바뀌게 된다. 무역대리업체는 매 2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령은 또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출승인간주(모든 일람불신용장및 3만달러이하의 기타 방식 거래에 대한 수출승인을 세관신고로 갈음)를 반영하는 동시포괄수출승인제를 폐지했다. 포괄수출승인제를 폐지한 것은 수출승인간주가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령은 또 수출대금의 미회수 처리및 수입대금의 미지급처리 승인의 근거로서 현지공관, 현지은행및 현지상공회의소의 확인분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가 대금회수 불가능을 확인한 경우(수출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산업설비수출업체의 자유로운 입찰경쟁을 위해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 신고제 폐지에 맞춰 신고대상, 신고및 신고수리절차, 산업설비 수출기금 출연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산업설비수출이 일반상품 수출과 똑같이 취급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WTO/섬유 및 의류협정 발효에 맞춰 섬유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새로 도입됐고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품목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시키거나 원산지 검사를 회피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됐다.

## 올 中企제품 19조 8천억 구매

— 通産部, 작년보다 2조원규모 늘려 —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작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9조 8천억으로 책정하고 中企의 수주확대를 위해 발주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가기로 했다.



통산산업부는 올해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들일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 포함)구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 9011억 700만원 늘어난 19조 8144억 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총구매규모 역시 32조 3176억3천만원에서 33조 1842억 1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비중은 작년의 55.4%에서 59.7%로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기기관이 13조6194억2200만원중 7조 1225억2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는 7조6587억 5700만원 가운데 6조6455억4900만원을 각각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데 쓰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은 11조9060억3600만원중 6조463억7300만원어치를 중소기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중에서는 조달청이 4조 45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경기도가 1조2078억300만원을 각각 중소기업으로 채울 예정이며 정부투자기관 가운데서는 한국전력공사가 2조3240억5800만원어치의 물품과 공사를 중소기업에게 발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매규모 확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물품별 세부 발주계획 및 구매관련 정보를 관련조합에 알려주고 구매부서에 중소기업 구매담당자를 배치, 상담에 응하도록 했다.

또 단체수의계약 물품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구매하고 부득이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할 경우라도 중소기업의 참가폭을 확대키로 했다.

특성상 조금씩 자주 구매해야 하는 물품은 단가계약품목으로 지정, 조합과 연간계약을 체결해 계획 생산에 의한 안정가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정 상표·규격을 지정하거나 원·부자재에 대한 특수조건을 요구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막지 않도록 하고 단체수의계약물품 이외에는 품질·성능·효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낙찰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하 지방기관의 계약한도액을 증대, 관련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조달토록 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도 참가 자격을 해당지역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구매가 운영과정에서 가격상승·품질저하·기술개발 소홀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대상물품을 작년의 496개에서 올해는 315개로 축소하고 66개 품목을 경쟁물품으로 지정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올해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조 9천억원이다.

## '95 長期電力 需給計劃 마련 - 2천 10년까지의 청사진 확정 -

▲현재 2%수준에 불과한 民資發電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요관리목표를 10%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2천6년까지 폐지계획인 6백20만kw의 발전소 수명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95년 장기전력수급계획」이 11월 확정된다.

이 장기전력수급계획은 96년부터 2천10년까지 15년간의 발전소건설·수요관리·송변배전시설확충 방침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91년 수립된 제1차계획(91~2천4년), 93년 마련된 2차계획(93~2천6년)을 토대로 최근 수요변동과 전력사업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장기전력수급심의위원회를 정점으로 전원개발정책·수요예측 및 수요관리·발전설비 계획·계통계획·원자력발전소위원회등 5개의 소위원회를 전원기술개발·통합자원계획소위원회등 2개를 추가, 7개의 소위원회로 늘려, 계획의 분석성과 예측성을 향상시킨 가운데 수립중에 있다.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각분야별 연구실적과 7개 소위원회에서 검토 작성한 기본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장기전력수급계획 시안을 작성한 후 10월 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최종안을 확정 전력설비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공해물질배출방지에 집중투자 ▲전기품질향상과 정보자동화로 인한 송배전분야의 투자 확대 ▲정확한 수요예측기법의 개발로 적정예비율 확보 ▲광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한 무연탄발전의 확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발전소 건설·송배전시설등에 대북협력방안 반영 ▲청정에너지인 대체에너지의 기술투자 ▲해외전력사업 진출 확대등의 정책등이다.

통산부가 이번 발표한 기본방향을 보면 지난 93년 작성된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연차적으로 폐지키로 했던 호남화력 제주화력 부산화력 울산화력발전소 등 총 6백20만kw 용량의 기존발전소를 개보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신규발전소의 부지확보가 어려운데다 많은 재원이 소요돼 일부시설 개보수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확실한 근거없이 사용해왔던 전력예비율 수준 15%가 너무 높다고 보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2010년까지 적용될 장기전력수급계획에는 예비율 기준을 1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 資本財 표준화대상 지정 - 공진청, 對日수입 3천만\$이상 품목 등 -

對日 수입규모가 3천만달러이상이거나 최근 3년안에 국산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자본재 표준화대상으로 지정돼 부품·소재규격이 통일·단순화되고 품질보증을 위한 심사·검사규격 개발이 뒤따르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산업기계 등 자본재의 對日수입 증가가 국산 개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검사규격이 없거나 동종업체간 부품·소재의 공동 사용을 위한 표준규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개선키 위해 ‘자본재 표준화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본재표준화기획단’을 발족시켰다.

工振廳은 對日 수입규모가 3천만달러이상인 품목 등을 KS 규격 대상과 단체규격 대상으로 분류, KS 규격은 자본재 핵심소재·부품이거나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125억원에 이르는 소요비용 전액을 산업기술기반조성 자금에서 지원하고 단체규격은 해당업종에 한정되는 특수규격을 대상으로 업계와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재규격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KS 규격 300종, 단체규격 200종 등 모두 500종이 개발되며와 별도로 자본재표준화가 시급한 18개 품목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통산부 등 관계부처 국장과 기계공업진흥회·전자공업진흥회 등 생산자단체,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재표준화 기획단’은 올 7~9월까지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 ‘자본재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표준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제품과 동등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KS 허가 지방 工振院서도 취급

## — 工振廳, 지방화시대 맞게 改善방침 —

앞으로 지방공업기술원을 통한 규격획득이 가능해지는 등 KS제도가 기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크게 바뀐다.

공업진흥청은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KS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工振廳에서만 받던 KS표시허가 신청이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에서부터 허가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장심사와 관련,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행사와 분임조 조직률 등 형식적 평가요소를 배제하고 △품질경영조직·물류관리 등 기업이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심사항목에서 삭제하며 △사내표준화 일반사항과 검사설비 등에 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등 품질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도록 했다.

대신 품질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관리·품질관리·자재관리 등을 강화, 전체적으로 심사항목을 30개에서 20개로 줄였다.

이와 함께 중전에는 공장검사 결과와 제품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처분을 따로 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연계,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검사 결과가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표시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보완토록 개선명령을 완화했다.

특히 표시정지 처분기간도 일률적으로 3개월로 돼있던 것을 제품결함정도에 따라 1~3개월로 다단계화하고 행정처분을 2번이상 받은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공장이전·양도양수 등에 의한 지위승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의신청, 규격개정 및 생산중단시 받아야 했던 특별공장검사도 이의신청이 있거나 공장이전시에만 받도록 축소해 대부분의 KS업체의 사후관리 공장검사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생산상황 등 7종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상황·생산중단·공장이전보고만 하도록 간소화하고 표시정지·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대표자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처분기간 만료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교육도 없었다.